

주간 통일정세

2015-03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대화와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출로"(1/15, 평양방송)
 - 북한은 15일 평양방송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다른 아닌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방송은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북과 남이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부터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기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대화제안에 '침묵'... '관계개선' 목소리만(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대결정책 전환은 북남관계 새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결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아무리 진정성을 외워대도 그것은 여론에 대한 기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동족에 대한 신뢰에 앞서 적대와 불신의 감정만 내세우면서 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질 수 없고, 대화 분위기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또 신문은 '민족공동이 통일현장, 통일대강을 따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7·4 공동성명(1972년), 6·15 공동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 등 남북이 과거 합의한 통일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재촉…“진정성 보여라”(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북침 합동 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침전쟁연습들을 전면 중단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함.
 -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조선반도에 핵전쟁 도발을 꿈꾸는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폄하하며 "(연합훈련이) 중당에 빚어낼 것은 핵전쟁의 재난뿐"이라고 위협하면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두만강지역 개발에 남북 경협 적극 검토"(1/13, 연합뉴스: 11/15, 사회과학원 학보)
 - 연합뉴스는 13일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 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회(2014년 11월15일 발행)에 실린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함.

- 지난해 남북교역 21억달러 넘어…최대 규모(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관세청 남북교역통계를 인용하여 남북교역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지난해 21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함.
 -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 금액은 10억3천528만 달러,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금액은 10억9천345만 달러로 교역 규모가 총 21억2천873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남북교역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라고 뉴스는 전함.

- 현대아산, 개성공단에 2호 면세점 개장(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자인 현대아산(대표 조건식)이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층에 '현대 면세점 개성 2호점'을 개장했다고 전함.
 - 뉴스는 14일 개장 행사에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현지 공단 관계자들과 현대아산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에 문을 연 개성 2호점은 130㎡(약 40평) 규모로, 국내에서 제조된 명품 잡화와 최신 전자제품, 고급 화장품 브랜드 등이 입점해 있다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의사 지난해 표명(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국방부 한 관계자가 "지난해 하반기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에서 북한을 비롯한 회원국에 대해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여부를 문의했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10월1일 CISM 측에 참가하겠다는 1차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CISM 측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3월15일까지 2차 동의서를, 8월1일까지 3차 동의서를 각각 받게 되어 있다"면서 "3차 동의서에는 선수 명단과 이동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것"이라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또 그가 "북한은 국제대회에 참가 의향을 표명했다가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참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오는 8월 3차 동의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고 전함.

- 한적 "연내 이산가족 정례 상봉 추진"(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5일 보도를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가 15일 한적 본사 강당에서 창립 11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 준비전략을 골자로 하는 '액션 110' 선포식을 거행하고 "올해 안으로 이산가족 정례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김 총재는 우선 남한의 6만8천여 이산가족 생존자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 작업과 기존 상봉자들의 편지교환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연맹(IFRC)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뉴스는 전함.
 - 또 뉴스는 김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국제공조를 통한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과 분단 70년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함.

-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해서는 언젠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없으며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南 당국은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1.12, 평양방송)
- 김정은의 조국통일 영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필승의 영도"라며 온 겨레의 '김정은 영도따라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빛낼 것' 주장(1.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軍 훈련(신년 전투결의대회·혹한기훈련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자도 군부의 이런 움직임을 묵인하고 있다"며 남한 당국은 "대화인가 전쟁연습인가에 대한 대답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1.16, 중앙통신·민주조선)
- '조국통일은 통일애국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갈 때만이 이룩할 수 있는 거족적 위업'이라며 '7.4공동성명과 6.15·10.4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연일 주장(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동해 해상합동훈련과 3월에 있을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진행 예정을 거론 '남조선 당국이 대화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반공화국 대결정책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진정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모든 전쟁책동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1.17,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유엔 차석대사 "미국에 우리 제안 직접 설명할 준비돼"(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주 유엔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가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 1년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전달한 제안과 관련,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고 14일 보도함.
 - 뉴스는 그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라고 전제, "남북한 간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특히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규모와 범위가 계속 증가했다"며 "한미 간의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주영 북한 대사, 미국에 '북한 제안' 수용 거듭 촉구(1/17, APTN)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런던에서 16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미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며 "그럴 경우 북한은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는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이 보도함.
 - 그는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거절한 것과 관련해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화 상대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화나 어떤 진전도 가능하지 않으며,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조선신보 "북한 제안은 행동대행동 원칙에 따른 것"(1/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합동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핵시험의 임시 중지를 대치시킨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일치된 본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준한 제안"이라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은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으로 보고 있다"며 "자위적 핵억제력은 그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설명함.
 - 신문은 이어 "만약 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이 말하듯이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면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제안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북한의 대미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며 북한의 이번 제의에 정확한 회답을 보내줄 것을 미국 정부에 거듭 당부함.

- 북한, 한미해상훈련 비난... "대화파괴 노린 도발"(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해상합동군사연습 획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거론하며 "(한미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우리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또 훈련에 참여하는 미 해군 구축함 머스틴함, 광개토태왕함 등을 '선제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과 미국이 "정례훈련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북침 합동군사연습의 정체를 가리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이번 훈련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정책전환을 촉구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침략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의 구렁텅이 더 깊숙이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은 한국과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끝까지 견지한다"(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우리는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국제정세와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지난해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대표적 사례로 꼽음.
 - 또한 신문은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고 있다"며 "우리가 선군의 가치를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실증해준다"고 역설하고, "필승불패의 혁명적 무장력이 있고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이 있는 한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면서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함.
- 북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훼방꾼"(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분열이간 책동'으로 규정하며 적대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함.
 - 신문은 특히 "격분스러운 것은 새해 북남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높아가는 때에 미국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의 조짐을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대결과 살벌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미 당국자들은 덮어놓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함.
 - 신문은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미국에 '추종'해 "동족끼리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손해볼 것은 우리 민족 밖에 없다"며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 "한미일 정보공유는 미국의 패권 위한 것"(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냉전을 몰아오는 3자 합의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책동을 합리화함으로써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대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도 이런 움직임 중 하나라고 분석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을 '악의 원흉', '부정의 왕초'라고 비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조작책동을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군사훈련 중단 없이 실제적 대화 불가능"(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오는 3월 초 실시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북침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의 대화는 물론 조미(북미) 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함.
 - 또 "우리의 제안대로 올해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론이 붓물처럼 터져나온 사실도 거론하고 "총체적으로 보건대 미국은 올해에도 긴장완화가 아니라 대조선 압박정책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은 이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열하고 악랄한 술책과 방법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무분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1970년대 북한 대미외교 선봉엔 '조미우호홍보센터'(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5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북한사료연구팀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들의 내용을 인용하여 1970년대 북한이 조미우호홍보센터(AKFIC)라는 단체를 앞세워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문서들에 따르면, 미국 공산당 소속 조셉 브란트와 코네티컷대학 하워드 파슨스 교수는 1971년 2월24일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사무실을 내고 AKFIC의 창립을 선언했고, 이 단체는 창설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 지지할 것을 공개로 촉구하는 등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미외교를 전개하였다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이 단체가 1970년대 중반을 넘기며 북한이 해외 교류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으면서 재정 문제에 봉착했고 1976년 조용히 해체됐다고 덧붙임.

마. 대중국

- 북-중 최대 육로국경 단둥, 작년 출입국자 20% 감소(1/12, 중국신문사)
 -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검사검역국은 지난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최대 육로국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통상구의 전체 출입국자를 연인원 32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2일 보도함.
 - 매체는 단둥 통상구의 연간 출입국 인원수가 최근 수년간 40만 명을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방지 국제협력 강화"(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우리 중앙은행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는 편지를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제출했다"고 밝혔음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또 대변인이 "행동계획의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기구적 조치들"이라며 "기구와의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 등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행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미얀마, 북한 요청에 영화 '인터뷰' 복제판 단속"(1/16, 미국의소리; 이와라디)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얀마 영자신문 이와라디를 인용해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1일 우민쑤에 양곤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터뷰'의 복제와 배급, 판매를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난 뒤 양곤 경찰 당국이 외국 영화 불법 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16일 전함.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12.29)은 "미국 주도 MD(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의 첫 공정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亞-태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새로운 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1.13, 중앙통신)
- 일본의 역사왜곡행위(문부과학성,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중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삭제 사용) 비난(성노예 피해자들과 여성들 모독 등) 보도(1.13,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체결(12.29) 관련 "미국의 亞·태지배전략의 산물"이라며 '있지도 않은 핵 및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군사적 공모결탁을 일층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새로운 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비난(1.14, 중앙통신)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지난 7일 김 黨 제1비서에게 보낸 전문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관계와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힘(1.16, 중앙통신)
- 일제의 조선 여성 20만 명 일본군 성노예 강요 등 "반인륜 범죄행위 및 과거범죄 회피"를 비난하며 '일본의 과거청산' 촉구(1.16, 평양방송)
- 유엔인구기금 가입('85.1.17) 30주년을 맞아 '양성일'(北인구연구소 실장)은 '공화국 정부는 기금과의 적극적인 협조 밑에 나라의 인구와 재생산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17, 중앙통신)
- 일본의 과거 성노예 범죄를 거론하며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그 피값을 기어이 받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1.18, 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시찰...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돼(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공군) 시찰 소식을 전하며 그를 수행한 리병철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소개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가 이번 시찰에서 지휘부 간부들과 담화를 갖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비행 전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내용과 형식, 방법이 현대전의 양상에 맞는 훈련, 실전 환경과 접근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강조하였으며, 체육·문화시설도 둘러보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향후 영화관 시설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전함.
 -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최영호 공군 사령관, 손철주가 현지에서 영접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강동정밀기계공장 방문...현대화 강조(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군수공장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가 "공장의 주요한 과업은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과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이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강동정밀기계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공장 현대화 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함.
 - 이번 방문에는 김 黨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홍영철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이들을 영접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육인식품공장 시찰...품질 개선 독려(1/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체육인을 위한 식품공장인 평양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공장을 둘러본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인민들과 체육인들 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고 치하하고 이 공장이 "체육 부문뿐 아니라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장"이라고 강조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리일환·한광상 당 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영훈 체육상과 신용철 체육성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이들을 공장에서 맞이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리용호, 싱가포르 향발...북미 '탐색대화'(1/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15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5일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함.
 - 리 부상 등은 오는 18~19일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서방 제재 부각하며 '김정은 충성' 강조(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받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미국과 그 지지세력들이 북한을 흔들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변심 없는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어떤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심리모략전도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흔들 어 놓을 수 없다"며 "목숨을 버릴지언정 체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정신"을 주민들에게 주문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정은 세습' 유훈 교시는 군대와 주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라며 "절해고도에서도 수령결사옹위의 삶을 빛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체육강국' 건설 주력... "과학화 중시"(1/11, 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필승의 기상을 펼치며 체육강국의 봉우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경기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 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 시작됐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계 훈련 소식을 전함.
 - 또 다른 기사에서는 체육의 과학화를 강조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침에 따라 조선체육대학과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함.

- 김정은,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3, 중앙방송)
- 노동적위군 창건('59.1.14) 56주년 즈음 "김일성의 자위적 군사사상과 전민무장화 방침이 낳은 자랑찬 열매, 노동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노선의 빛나는 승리"라고 기념 글(1.13, 중앙통신)
- '정치사상적 위력은 나라와 민족의 제일가는 힘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하며 '모두다 김정은 두리에 굳게 뭉쳐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자'고 호소(1.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년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1946.1.17) 69주년 경축 청년중앙예술 선전대공연, 1월 1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및 최룡해(黨 비서) 등 관람 (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나라와 민족의 자주와 번영은 군사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틀어쥐고 나갈 때에만이 보장될 수 있다'며 '총대로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혁명의 원리는 절대불변'이라고 강조(1.17,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수입품에 대한 환상은 병"...북한 '국산품 애용' 독려(1/11,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우리 식으로 우리의 맛이 나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자립을 강조하며 "창조와 건설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수입병을 대담하게 털어 버려야 한다"고 주문함.
 - 신문은 주민들이 남의 것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수입에 의지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산화 노력을 '애국헌신의 기풍'으로 치켜세움.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보도함.
 - 윤 부회장은 "경제개발구가 있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하부구조(인프라) 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건물, 도로 건설과 전기, 통신 등이 반영된 개발총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이상 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이상 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 어랑, 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또 윤 부회장이 이를 위해 "평양시와 라선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 전시회, 박람회들에서 경제개발구총계획들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제시했으며 북한이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경제개발구들을 통해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함.

- "북한 평양 협동농장 생산물 75% 농민들 몫"(1/14, 민족통신)
 - 민족통신은 14일 북한 평양의 한 협동농장에서 곡물 생산량의 약 25%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만경대협동농장에서는 한 해 2천700t의 곡물을 생산하며 "국가에는 700t의 알곡만 바친다고 하니 농민들은 나라로부터 너무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만경대협동농장보다 형편이 나쁜 농촌 지역 농장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곡물의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함.
 - 통신은 또 농민들에게 분배를 마치고도 남는 곡물은 수확량에 따라 1인당 1~2t까지 나눠주며 채소와 과일은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은행에 입금해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고 덧붙임.

다. 경제 상황

- 북한, 대체에너지 활용 '녹색제품' 잇달아 개발(12/11, 조선중앙TV; 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도시경영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며 낙랑구역 도로·강·하천시설 사업소가 개발한 '태양전지 자동도로청소기'를 소개하며 이 청소차가 태양열을 활용해 공해가 전혀 없고 한 시간 내 2만㎡를 청소할 수 있어 청소부의 수고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12월 11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김용산 풍력발전연구실 실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실험을 거듭해 풍력발전 효율을 40% 이상 높이는 발전기 날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자연에너지 활용을 위해 새로운 발전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작년 말 몽골서 송아지 원조받아"(1/12, 환구시보)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몽골 현지 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가축 사육을 통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몽골로부터 송아지를 대량으로 원조받았다고 보도함.

- 푸레브수령 몽골 외무장관은 1월 9일 자국 매체를 통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1~2년생 송아지 104마리를 지원했다"고 밝혀 원조 제공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은 대략 7~8만 투그릭 (4만~ 4만5천 원)인데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북한에 다시 가축을 지원할 확률은 낮다"고 설명함.
- 신문은 또한 지난 2013년 10월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식량 문제 해결을 돕는 차원에서 소와 양 등 1만 마리의 가축을 원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소개함.

■ 북한, 스위스 관광엑스포 참가...마식령 스키장 등 홍보(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5일 북한이 스위스 베른 엑스포전시장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관광행사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지난 2013년 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함.
- 뉴스는 주독일 북한대사관에서 이번 행사에 파견된 북한 국가관광총국 소속 리영범 대표가 "겨울이 긴 우리나라 특성상 스키 등 겨울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마식령 스키장이 외국인에게도 개방됐느냐는 질문에 "지난 2013년 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지난해에도 일부 외국인이 찾아왔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평양시 버섯공장, 버섯생산 시작 보도(1.12, 중앙통신)
- 황해북도(수만 거름·수십종의 영농물자들)·함경남도(4일, 수만 도시거름)·자강도·강원도 근로자들의 "농촌 지원" 소식 보도(1.13, 중앙통신)
- 농산·축산·수산 부문의 생산성과를 선전하며 '조선의 각지가 농산·축산·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열의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1.15, 중앙통신)
- 영변견직공장, 비단천과 일반천 생산성과(매일 수천 미터의 천 생산) 선전(1.15, 중앙방송)
- 문천강철공장, 새해 첫 달 철강재 생산에서 혁신(1.15, 중앙방송)
- 전국 각지에서 버섯과 온실남새(평양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 '증산 투쟁 전개 성과' 및 황정옥(남포시)은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재배한 버섯을 '국가에 수매, 가정살림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선전(1.16, 중앙통신)
- 신의주농업대학에서 신형 토양산도 측정기·수분측정기 개발 및 용천군 등 20여개 시·군들 도입 성과 선전(1.16, 중앙방송·노동신문)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기능성 3겹 온실박막' 생산 선전(1.18, 중앙방송)
- 평양시 일꾼들, 온실남새 비배관리에서 성과(1.18,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해외출장 주민 가족 격리...에볼라 방역(1/15, 미국의소리)
 - 북한이 에볼라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곧 HD방송 시작할 듯...수신 주파수대역 변경(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하는 주파수 대역을 HD(고화질)급 방송이 가능한 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전함.
 - 이어 주파수 대역은 변경됐지만 아직 중앙TV와 중앙방송은 모두 SD신호로 송출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고려항공 페이스북 해킹 당해(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페이스북 웹페이지가 이슬람 단체를 표방하는 해커들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고려항공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7건 게재됐고, 해커들은 고려항공 페이지에 복면을 한 이슬람 전사의 모습과 함께 '사이버 칼리프국(CyberCaliphate)'이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올림.
 - 해커들은 고려항공 페이지에 영문으로 북한을 '공산주의 깡패국가'로 비난하며 "중국 공산주의 깡패들과 함께 이슬람 전사의 적들과 공조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과학영재학교, 과외학습용 수학 프로그램 개발(1/18, 연합뉴스 12/15, 인민교육)
 - 북한 최고의 과학영재 학교인 평양제1중학교가 학생들의 방과 후 수학 과외학습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지난해 12월 15일 발간된 북한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6호는 '수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수학을 이용하는 1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자학습 지도방법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제1중학교 학생들의 과외학습에 대한 지도에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자학습(자율학습)지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학교육지원프로그램 '수학'을 제작했다"고 밝힘.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닌 남산학교의 후신인 평양제1중학교는 남한의 과학고등학교에 비견될 수 있는 곳으로, 북한 전역의 수재들만 모인 과학영재교육기관답게 전용 IT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자강도, 현대적 미감이 나는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선전(1.14, 중앙방송)
- 北,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에 주력(1.15, 중앙방송)
- 정학진(4.25체육단)·양경일(용남산체육단) 선수의 국제레슬링연맹(FILA)에서 2013~2014년 남자 자유형 57kg급 세계순위 1-2위 발표 보도(1.16, 중앙통신)
- 北, 김정일 생일(2.16) 즈음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1.17, 중앙통신)
- 北, 신년사 사상을 반영한 우표들(개별우표 4종) 발행(1.17, 중앙통신)
- 北 중앙예술단체들과 예술선전대들, '경제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예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고 선전(1.17,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일, 1월 28일 도쿄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1/1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월 28일 도쿄에서 3자 협의를 개최한다고 일본 민방 TBS가 13일 보도함.
 -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은 이번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무조건적인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반면 한·미·일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선행조치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6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각각 2, 3차 핵실험을 단행함.

- 러시아·미국,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 (1/17, 연합뉴스)
 - 러시아의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현지시간) 전화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러·미 협력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함. 외무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임.
 -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김 특별대표와의 전화통화에 앞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면담함. 외무부는 "김 대사와 면담에서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일부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함.

나. 미·북 관계

- 국무부 관리 "북·미 싱가포르 접촉에 정부 관여 안해" (1/1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관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대북협상 대표들이 금주말 싱가포르에서 접촉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 관리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번 접촉은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이슈를 논의하는 많은 '트랙 2(민간)' 접촉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함. 외교가에서는 이번 접촉에 북한 외무성 현직 관리들이 나오고 미국 측도 과거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관료출신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트랙 1.5(반관반민)' 형태의 접촉이라는 평가가 나옴.
 -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접촉에는 북한 측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미국 측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참석함.

- 미국 "가용수단 총동원해 북한 제재 ... 금융 고립 심화될 것" (1/14, 연합뉴스)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대표는 이달 안에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 리용호, 싱가포르 향발 ... 북미 '탐색대화' (1/15,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15일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출국함. 교도통신은 이날 리 부상 등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리 부상은 (일본)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질문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리 부상 등은 오는 18~19일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을 만날 예정임.
 - 미국은 그러나 이번 접촉에 대해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이슈를 논의하는 많은 '트랙 2(민간)' 접촉의 하나"라며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취함.

- 미국 "남북대화, 북 비핵화협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 (1/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남북대화의 진전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대화 지지 입장을 거듭 밝힘.
 -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추진되는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빛 썰 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이 관계자는 "미국은 건설적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해 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대화 노력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임.

- 북미 싱가포르 접촉 ... 미국 시걸 국장 "핵문제 다룰 것" (1/1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미국 측 참가자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번 접촉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것"이라며 서로의 기류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함.
 - 시걸 국장은 북한 측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고 말함.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북한 외무성 현직 관리들과 과거 미국 측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관료 출신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트랙 1.5(반관반민)' 형태의 접촉이라는 평가가 나옴.

다. 중·북 관계

- 중국 대북교역 거점 단둥, 오는 8월 고속철 연결 (1/15, 연합뉴스)
 -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댄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올해 하반기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연결됨. 중국 정부는 자국의 동북 최대 도시이자 교통 요충인 선양(瀋陽)과 단둥을 연결하는 총연장 205km의 고속철도를 오는 8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 함.
 - 현지 매체들은 단둥이 선양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 북·중 간 인원 왕래와 교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함.
 - 단둥의 철도와 도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량은 양국 간 무역 총량의 80%에 달하며 단둥역에는 평양을 오가는 북·중 국제열차가 매일 운행하고 있음.
- 중국, 북·중 접경에 민간인까지 동원해 치안강화 (1/15, 연합뉴스)
 -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탈영병의 중국인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당국이 민간인까지 투입시켜 북·중 접경지역 마을의 치안 강화에 나섰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5일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옌벤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坪)촌에서 북한 탈영병이 중국 주민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지역의 치안 불안이 노출된 데 따른 것임.
 - 최근 북한 탈영병 사건 이후 중국 언론에서는 북·중 국경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보도됐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북한인의 월경 살인사건이 수십 건, 약탈 범죄는 100건이 넘는다는 보도까지 나옴.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유엔, 북한 대사에 남북대화 재개 지원 용의 전달 (1/15, 연합뉴스)
 - 유엔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이며 양측의 대화 재개를 돕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함.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 엘리야스 유엔 사무부총장은 전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이 밝힘.
 - 엘리야스 부총장은 자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대화 제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남북간 대화만이 상호신뢰 구축과 관계 발전을 위한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를 다시 역설함.
 - 엘리야스 부총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북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크 부대변인은 전함.
- 반기문 "대화만이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길" (1/16, 연합뉴스)
 - 지역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틀간 일정으로 온두라스 등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이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하며, 유엔 차원에서도 남북 대화 재개를 돕겠다는 의지를 한결같이 갖고 있다고 반 총장 측이 15일(현지시간) 전함.
 - 앞서 반 총장은 지난 14일 안 엘리야스 유엔 사무부총장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사무부총장을 통해 이러한 뜻을 전달함.

- 그러나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화 제의를 한 상태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움직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구체적인 대화 재개 움직임 없이 대북 전단 살포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등만 요구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국무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환영" (1/1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전제조건은 없다며 대북대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힘.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 당국에 (한국의 대화 노력에)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함.
 -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분단돼 고통을 겪지 않느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또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힘.
- 미국 "한일 관계 개선, 대화로 푸는게 최선" (1/1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외교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대화로 푸는 게 최선"이라고 밝힘.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역내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하프 부대변인은 또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19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을 방문해 독일 마셜 기금(US-German Marshall Fund)이 주최하는 3자 포럼에 참석한다"며 "이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나. 한·중 관계

-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 한반도정세 포괄적 논의 (1/05, 연합뉴스)
 -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한·중 양국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양측 외교부 국장급 인사와 국방부 부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2차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함.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쿵쉬안여우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안보분야 협력,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이 논의됨.
 - 동북아 정세와 관련,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됨. 한·중 양국 내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중·일 FTA 수석대표 협상 담보 ... 4월 서울서 다시 회동 (1/17, 연합뉴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수석대표 협상이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렸으나 관세 철폐 문제 등을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함. 3국은 이번엔 관세철폐 품목 비율, 철폐까지의 기간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위한 교섭 방식을 중점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이번 협상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참가함.
 - 3국은 오는 4월 서울에서 7차 수석대표 협상을 갖기로 함.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원산지 등 20여 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다. 한·일 관계

- 아베 "위안부문제 가슴 아픈 일, 정치문제화 안타깝다" (1/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총리관저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의원들을 28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노(河野) 담화(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부정하지 않으며 계승한다"고 말함.

-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된 조치나 구상을 밝히지 않은 채 "(군위안부 문제가) 정치, 외교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함.
- 그는 또 "우리는 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는 일·한 수교 50주년이니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위해 나도 박대통령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일, 19일 도쿄서 軍위안부 6차 국장급 협의 개최 (1/16,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1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6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힘. 이번 협의는 지난 11월27일 5차 협의에 이어 2개월 가까이 만에 열리는 것임.
-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속히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장급 협의에서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안은 제시하지 않는 상태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을 방문한 우리측 국회의원과 만나 "(군위안부 문제가) 정치, 외교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함.

■ 한·일 지사 교류회의 7년만에 재개 ... 29~31일 도쿄서 (1/16, 연합뉴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시도지사 교류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됨. 박성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은 16일 "이 회의가 오는 29~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밝힘.
-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중앙 정치권에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지방정부끼리는 경제나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 지사는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 지사가 지방정부간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고, 그 직후 마련된 시·도지사 간담회 때 박 대통령이 이런 점을 언급했다"며 "이 때부터 교류 재개가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함.

- 日, 美교과서 '위안부 기술' 조직적 왜곡 시도 (1/18, 연합뉴스)
 - 일본 극우단체와 정부가 미국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내용을 왜곡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소속의 다카하시 시로 메이세이 대학 교수는 최근 국가기본문제연구소(JINF)에 게재한 영문 기고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해 실사(實査)를 벌였다고 밝힘.
 - 다카하시 교수는 특히 상세한 실사 결과를 일본 뉴욕 총영사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고 털어놓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한반도 긴장 가져오는 행동에 반대" (1/1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12일 "한반도의 정세의 긴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함.
 -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힘.
 - 홍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를 주장하고 또 희망한다"고 말함.

바. 미·일 관계

- "미국, TPP협상 두달내 마무리 짓겠다" ... 미·일 막바지 협의 (1/14, 연합뉴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진행 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앞으로 2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공화당을 장악한 상원 지도부도 행정부에 신속협상 권한(TPA)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상원 공화당의 2인자인 존 코니언(텍사스)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가 상원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 2개월 내에 협상결과를 의회에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함.
 -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미를 검토 중인 올 4~5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현재 일본을 방문해 막판 양자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군, 최신예 이지스함 올여름 일본에 추가 배치" (1/17,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은 최신예 이지스함을 올여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기지에 배치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함. 이번에 배치되는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방어(BMD) 대응형은 아니지만 다른 항공기 등과 공조해 방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신예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것으로, 이 이지스함의 일본 배치는 처음임.
 - 중국 군사력 증강 및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를 중시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이지스함 추가 배치로 미일 해군의 이지스함은 현재보다 3척이 늘어나 모두 12척 체제(BMD 대응형은 8척)가 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임. 앞서 미군은 BMD 대응형 이지스함 2척을 2017년까지 요코스카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함.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아. 중·일 관계

- '센카쿠 갈등' 중·일, 해상연락메커니즘 구축 합의 (1/13, 연합뉴스)
 -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재개된 당국 간 협상에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양국의 해상 연락 메커니즘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12년 6월 이후 2년7개월 만임.
 - 중국 국방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양국의 국방부문이 전날 도쿄에서 해상 연락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제4차 전문가 조직 협상을 진행했다"며 "양측은 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한 공통인식에 이르렀다"고 말함.
 - 또 "양국 국방부문이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에도 협상을 진행해 일정한 공통인식에 이르렀다"며 "양측은(협상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정 작업을 마친 뒤 이 메커니즘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센카쿠 전담 경비대 연내 설립" <교도통신> (1/14, 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전담 경비대를 연내 설립할 것이라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재 건조 중인 6척의 대형 순찰함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모두 12척의 대형 순찰함과 600명가량으로 구성된 센카쿠 전담 경비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일본은 또한 고성능 소형 순찰함과 신형 기체분사기를 센카쿠 해역에 배치해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이 올해 해양 경비 예산을 작년보다 50%가량 증액한 가운데 이처럼 센카쿠에 대한 경비 강화에 나서기로 해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 중국,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우려' 표명 (1/14, 연합뉴스)
 - 중국은 14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방위예산을 전년도 대비 2% 인상한 4조 9천801억 엔으로 책정한 것에 우회적으로 우회의 뜻을 표명함.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그것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가는지를 판단하는 풍향계"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 발전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지역의 평화안정 촉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일, 이달 중 도쿄서 고위 실무급 해양협약" <교도통신> (1/15,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는 해양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고위 실무급 해양협약'을 이달 중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함. 고위급 실무 협의는 중·일 양국이 우발적 충돌 회피를 '해상연락 메커니즘' 구축 협약이 지난 12일 방위 당국 간에 개최된 데 따라 열리는 것임.
- 교도통신은 이번 해양협약에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와 관련, 동중국해 위기관리와 자원 개발, 중국 어선의 산호 불법 조업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해양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일본에서는 외무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중국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해경국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임. 중일 해양협약은 양국 해양 관련기관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6월 시작됐으나, 같은 해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작년 9월 칭다오(靑島)에서 재개됨.

■ "중국군, 일본 겨냥 '동풍21' 미사일 백두산 배치" (1/18,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 일대에 대함 미사일인 '동풍(東風)-21'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18일 보도함.
- 이곳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동풍 21'을 배치해야만 일본 열도 전체를 목표지역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됨.
- 일본 열도 전체를 사정거리에 넣고 동해를 방어하는 동시에 북쪽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소야(宗谷)해협과 남쪽으로는 대한 해협까지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국외 파견 北인력 16개국 5만여명...국외송출 확대될듯"(1/14, 뉴시스)
 - 코트라는 14일 '북한의 대 아랍에미리트(UAE) 및 중동 인력송출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계획경제 붕괴 및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외화벌이 필요성으로 북한이 인력을 국외로 송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도출해냄.
 - 보고서는 "인력송출 사업은 경제재제하 북한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 중간단계의 착취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중인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강제, 임금지불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러시아(2만 명)와 중국(1만 9,000명),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UAE(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이 대표적인 파견지임.
 - 주로 파견되는 업종은 아파트·도로 등 인프라 건설, 동상제작, 벌목, 농업 및 어업 등이다. 최근에는 북한식당 요식업과 의사, 태권도 사범, 군조교 파견 등으로도 파견되고 있음.
 - 코트라는 북한 당국이 노동력 국외송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해 12억~23억 달러에 달해 대북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몰타 내 중국 기업, 북 노동자 고용 논란(1/14, 자유아시아방송)
 - 몰타공화국의 산업단지(Bulebel)에 위치한 중국 기업 'Leisure Clothing'은 노동 착취와 노동법 위반 혐의로 몰타 경찰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 12명을 고용하기 위해 몰타 당국(Employment and Training Corporation:

ETC)에 노동허가를 신청 중이라고 몰타인디펜던트(Malta Independent)가 최근 보도했음.

- 북한전문매체 NK News는 14일 '조선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대표의 말을 인용해 몰타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노동자에게 최소 700유로, 약 824달러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상당부분을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당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임.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기업의 노동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양면술 구사(1/15,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공개처형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김정은 권위에 도전하는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단행해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북도 주민은 "지금은 과거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총살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면서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범들도 공개적으로 총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주민은 흉악범들도 감옥에서 비밀리에 처형하는 분위기이며, 감옥 내에서 특정 죄수에게 독극물을 주사하거나, 고무망치 등으로 쳐서 사망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함.
- 공개 처형방식을 쓸 경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개처형을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최고위층 간부들에 대한 처형은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평안북도 지방의 주민 양 모씨는 "장성택 측근들을 숙청할 때와 지난해 10월 해주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을 처형할 때는 많은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기관총으로 단행됐다"고 증언했음.
- 양모 주민은 "이렇게 처형되는 간부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저지른 간부들을 증오한다"고 말해 간부층에 쌓인 주민들의 원한이 깊음을 시사했음.

- 북, 국경연선 지역 검열 시작(1/15, 자유아시아방송)
 -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하고 다른 사법기관들이 협조하는 '100일 전투'가 15일 북한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으며, 특히 국경연선지역들에는 '합동검열대'가 파견돼 전과기록이 있는 주민들을 재조사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00일 전투' 기간 사법기관들은 북한의 4대 범죄인 마약, 도박, 밀매(성매매), 불법영상물을 단속하며, 국경연선 지역의 경우 특별히 밀수와 불법휴대전화 사용이 더 포함돼 있다고 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올해 사법기관 '100일 전투'는 국가보위부가 주도하고 다른 기관들이 협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국가보위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 범죄소탕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음.
 - 소식통들은 "국가보위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봐서 자칫 올해 '100일 전투'의 초점이 반당, 반간첩 투쟁이 될 수도 있다"며 "국경연선 지역들에서 '100일 전투' 기간 중에 예상을 뛰어넘는 살벌한 검거선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2. 북한 인권

- 킹 특사, '북 인권' 논의 내주 유럽 방문(1/13,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회 공보담당은 13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가 오는 21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인권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Rights)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을 밝혔음.
 - 킹 특사는 유럽의회 인권위원장과의 양자대화 및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의 관리들을 비롯해 국제인권연맹(FIDH)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가질 계획임.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의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13일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키센카터 국장은 국제인권연맹은 올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함.

- 정의당, 진보정당 중 처음으로 '북한인권법' 발의 검토(1/14, 조선일보)
 -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야권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놓고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소 손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정의당 측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 정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용의 수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전함.
 - 이에 따라 정의당 내에서는 법안 발의 대신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힘.

- 정의당,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 사실은?(1/14, 오마이뉴스)
 -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으나, 14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정의당은 최근 당 차원의 북한 인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음.
 - 심상정 원내대표가 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 발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증언임.
 - 정의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은 있었으며 자체적 법안 발의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당론 발의를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음을 밝힘.
 - 반면, 박원석 의원 등은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데,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위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효과적 방안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은 방식인가를

두고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음.

-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북한인권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북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남북간 대화 협력 등 실효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 역시 "심 의원이 법안이나 결의안 등의 방식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추진한 적은 없다"라며 "의원실에서 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음.

■ 정부 "北반응 따라 북한인권 입장 달라지지 않아"(1/1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정부가 기본 입장을 달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 또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문제 제기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태우자"…신속처리 거론(1/15, 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강조한 김무성 대표의 지적에 대해 외교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외통위가 경색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주장했다.
- 유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도 14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실제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새정치연합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인돼"(1/15, 뉴스시스)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법은 남북갈등, 남남갈등을 야기 시킨다"며 "'반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법'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가짜 북한인권법"이라고 비판했음.
 - 서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북한인권개선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남북관계만 저해할 뿐"이라며 "북한인권관련법은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존권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럽서 '북 인권' 행사 잇달아(1/15,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음.
 -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제프리 클리프턴 브라운(Geoffrey Clifton-Brown)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북한 여성의 인권(The Role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Peace-Building)'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 이 토론회는 탈북자의 70퍼센트를 넘는 탈북 여성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음.
 - 토론회는 미국의 '분쟁 지역 여성인권 보호' 단체(Women4NonViolence in Peace and Conflict Zones)와 영국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단체 '유럽연합-북한 인권(EAHRNK)'의 공동 추진으로 진행되었음.
 - 독일의 본대학(University of Bonn)에서도 이날 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 등이 진행한 북한인권 행사가 열렸음.
 -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프랑스 최초의 탈북자 단체 출범식과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임.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9-23일 일본 방문(1/17,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9~23일 방일한다고 밝힘.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중 일본 외무상과 납치문제 담당상, 납치 피해자 가족, 비정부기구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며,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3. 탈북자

- 재입북 고경희 씨 오빠, 김정은에 동생 생사 확인 요구 공개서한(1/13, 미국의 소리)
 - 지난 2011년 3월 탈북해 한국에서 살다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입북한 고경희 씨의 오빠가 동생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유럽 민간단체 '북한인권 유럽연합' 블로그에 게재함.
 - 고경희 씨는 동생이 북한으로 돌아간 지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3년 12월에 동생 경희 씨의 아들을 데리고 탈북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임.
 - 고 씨는 이 서한에서 동생이 재입북 후 김 제1위원장의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으며, 특히 고 씨는 동생이 총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일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음.
 - 고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경희 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말을 믿고 자신이 설득해 동생이 재입북했다고 말했음.
 - 또한 동생이 지난 2013년 1월 북한 방송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보위부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태도를 바꿔 동생을 반역자로 몰며 수용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 탈북민 추정 17세 소년, 스웨덴에서 추방 위기(1/15, 크리스천투데이)
 -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17세 소년이 스웨덴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과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15일 밝혔음.
 - 스웨덴 이민국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년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고, 이 소년은 계속 항소했으나 거절당해, 현재 마지막 항소가 최근 제출된 상태임.
 - 이 소년은 16세까지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으며, 1년 전 탈북 후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스웨덴까지 오게 됐다고 했으나 이민국은 이 소년을 중국인으로 여기고, 그가 18세 되는 오는 3월 중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음.
 - 그러나 이 소년은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며,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의 강요로 지난 12일 중국 여권이 신청됐음.

- 시민연합 측은 이 소년이 중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반론 자료들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스웨덴 정부에 강제추방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음.
 - 또한 스웨덴에서 이 소년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이 소년의 한국인 접촉이 인정될 경우 강제 '실종'되어 정치범수용소나 감옥에 수감되거나 즉결심판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함.
 - 시민연합 측은 법률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추가로 지적했음.
 - 첫째, 스웨덴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들의 언어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민간기업 'Sprakab'의 불확실한 언어분석 결과에 의존했는데, 인터뷰 중 상당 부분이 유도질문 혹은 자연스럽게 답변하거나 서술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는 것임.
 - 둘째, 면접관은 소년의 어투가 북한 어투가 아니라는 Sprakab의 보고서를 공식 부정했는데, 탈북민 면접관에 의하면 이 소년은 북한에서 왔다는 결론이 명백했다고 함.
 - 또한 지난해 4월 영국 의회에 제출된 "Sprakab의 방법론적, 분석적, 통합적 큰 결함"에 대한 보고 등을 근거로 Sprakab에서 언어분석 대행을 맡은 부분도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음.
 - 시민연합 측은 유럽 국가들이 탈북민 신원 확인 등 조사에 있어 분석 능력이 부족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그러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음.
- '여자 빼앗아 친구 살해한 탈북자 중형'(1/18, YTN)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이 사귀려던 여성과 사귀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탈북자 허 모(2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지갑까지 훔치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탈북자 신동혁, 자서전 내용 부분적 오류 인정"(1/18,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생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집필자인 블레인 하든의 말을 인용해 "신 씨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데 대해 죄송해하고 있다"며 신동혁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신 씨는 탈출을 계획하던 어머니와 형을 감시자들에게 고발했던 일이 14호 수용소가 아닌 인근의 18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인정했음.
- 신 씨의 말을 전한 자서전 집필자 하든은 신 씨가 일부 내용의 오류를 인정한테 대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신 씨가 야만적 고문을 받은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4호 수용소든 18호 수용소든, (독일 나치정권의) 아우슈비츠(수용소)든 다카우든, 차이는 없다"며 "신 씨는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다"라고 언급함.

4. 이산가족

- **차대통령 "北 대화 이산가족 상봉 응해야"**(1/1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에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음.
 -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적 "연내 이산가족 정례 상봉 추진"**(1/15, 연합뉴스)
 -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는 15일 한적 창립 11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 준비전략을 골자로 하는 '액션 110' 선포식을 거행하고 "올해 안으로 이산가족 정례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한적은 대북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남한의 6만8천여 이산가족 생존자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 작업과 기존 상봉자들의 편지교환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임.

- 또한 국제공조를 통한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과 분단 70년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인데,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국제 공조체제인 협력합의전략(CAS)에 한적이 올해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참가할 것임을 밝힘.
 - 아울러 북한의 영유아 분유지원 사업과 의료장비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남북 청소년이 참가하는 식목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정부 "설 계기 이산상봉 제의 여전히 유효"(1/16, 연합뉴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음.
 - 이에 더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를 위한 별도의 남북 적십자 차원의 실무접촉은 현재로서는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기존에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제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전함.
 - 그는 "상봉 대상자 선정과 상봉 대상, 시설 점검 등의 준비에 최소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간)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합의되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준비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음.

5. 남북자

- 북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진전 없어(1/14, 미국의 소리)
- 북·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가 합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1차 조사 결과를 아직 일본 측에 통보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도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등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임.
 - 일본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가 13일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의 현황을 물었으나, 이에 대해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문제 담당상은 북한이 아직 1차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 야마타니 담당상은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일본 정부가 기한을 설정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밝히며,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북한이 재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과를 빨리 통보하도록 촉구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납치문제 재조사 현황을 점검한 뒤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무조건 기다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기한을 정해 놓고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말했다.

6. 국군포로

- '복송 국군포로' 한만택 씨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1/15, 연합뉴스)
 -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복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15일 한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처음으로 국군포로 복송과 관련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음.
 - 재판부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국군포로인 한 씨를 보호해 국내로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한 씨가 강제복송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음.
 - 재판부는 "국방부가 2004년 한씨가 생존해있고 중국에서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한씨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도 탈북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의 신분이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무원들

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 동안 염원했던 한 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됐고 한 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음.

7. 대북지원

- 몽골, 북한에 송아지 100여 마리 지원...축산 협력 확대(1/12, 미국의 소리)
 - 몽골 매체 '인포몽골리아'는 몽골이 지난해 말 북한에 송아지 104마리를 지원했으며, 이 사실은 푸레브수렝 몽골 외무장관의 지난 8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 푸레브수렝 장관은 몽골 동부 도르노드 지역의 처이발상 공항에서 지난 12월29일 송아지 104마리가 북한 고려항공 화물기에 실려 북한으로 수송됐다고 말함.
 - 푸레브수렝 장관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2013년 10월 북한 국민방문 중 식량 지원 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런 측면에서 몽골은 밀가루와 고기 같은 최종 단계의 식품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이 사업에 몽골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관여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유엔에 수송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몽골은 앞으로 북한 학생들이 몽골 농업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푸레브수렝 장관은 몽골이 지난해 북한에 1천8백50t의 밀가루를 지원했으며, 몽골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 같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단체, 평양 양어장에 첫 기술지원(1/13,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국제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는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으로 올해 초 평양과 남포에 있는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북한 농업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물고기 생산 증대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이 단체의 아시아 지원 담당자는 농사와 양어를 통합하는 농장 체계를 통해 토질을 개선하고 물고기 생산량을 높이고, 단순히 물고기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작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사육해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설명임.
 - 종합적인 식량 안보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물고기는 평양 북부와 남포 지역에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 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현재 북한에서 은퇴한 노인을 위한 거주지 마련과 건강 개선 사업 등 2가지 인도주의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은퇴자시설에 사는 노인들의 식량문제 개선 사업'은 유럽연합 국제개발청(EuroAid)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00만 달러로 27개월 동안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조선노인연맹 중앙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18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200여 노인들임.
 - 이밖에 프랑스 국제개발청의 지원을 받아 보살펴 줄 가족이 없으며, 낡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집에 사는 약 7,500명의 북한 노인에 거주 시설을 제공할 계획임.

- 월드비전, 올해 대북 지원에 80만 달러 투입(1/13, 미국의 소리)
 -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랜덜 스페도니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식수 사업 등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 이에 따라 어린이 5만여 명을 포함해 5만5천여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월드비전은 북한 주민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평안남도 지역의 마을에 우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아가페, 북 청각장애인 수화교재 발간(1/14,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의 국제구호단체인 아가페 인터내셔널이 장애인지원 단체인 투게터와 함께 북한의 청각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을 위한 수화교재를 발간할 예정임.
 - 아가페는 교재의 디자인 작업은 모두 끝났으며 인쇄가 끝나는데로 조만간 북한 전역에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 북한 주민을 위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수화교재는 모두 40여 페이지로 이뤄져 있으며, 간단한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음.
 - 아가페는 우선 5천부를 인쇄해 배포할 예정이며, 북한의 청각장애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이 책자를 공부하고 익혀 서로간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현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수화 표현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 수화교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총 1만8천 달러. 1차로 5천부를 발간하고 난 뒤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한 뒤 교재 수도 더 늘려 나간다는 방침임.
 - 아가페측은 현재 평양에만 9살 이하의 청각장애 어린이 수가 5천에서 1만명 사이로 추정되며 해당 연령 전체 어린이 가운데 1, 2%를 차지한다고 밝힘.

- 적십자, 2015 대북 예산 660만 달러 책정(1/14, 미국의 소리)
 - 국제적십자사(IFRC)는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지난 대북 사업 예산보다 1백만 달러 증가한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히어 구드온손 대변인이 밝힘.
 - 구드온손 대변인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데는 무엇보다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함.
 - 지난해 북한의 심각한 봄 가뭄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컸기 때문에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임.
 - 구드온손 대변인에 따르면 적십자는 올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북한 내 3개 도, 13개 군 주민들을 상대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벌일 것이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재난관리와 보건 사업임.
 - 이를 위해 적십자는 재난관리 분야에 미화 215만 달러를 배정했음.
 - 여기에는 재해가 잦은 마을에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훈련하는 일, 재난에 대비해 전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2만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방용품

- 과 방수비닐막, 물통, 위생용품 등 구호품을 비치하는 게 포함돼 있음.
- 적십자가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보건 사업에는 미화 221만 달러가 배정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약품을 공급하고 응급치료를 실시할 계획임.
 - 이밖에 식수위생 분야에 미화 126만 달러가 배정됐고, 나머지 예산은 조선적십자회 조직관리와 훈련, 재난 시 긴급대응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임.

8. 북한동향

- 일본의 역사왜곡행위(문부과학성,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삭제 사용) 비난(성노예 피해자들과 여성들 모독 등) 보도(1.13,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